

‘철새업체’ 난립 공사 싹쓸이

향토 종합건설업체 2008년 이후 306곳 줄도산

춘천에서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는 김 모(56)씨는 최근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때만 해도 올림픽 관련 시설공사, 유지보수공사, 부대사업 등 건설물량이 쏟아져 수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대형공사는 외지업체들이, 소규모 공사는 지역 중견건설사와 철새업체들이 싹쓸이하며 지난 4년간 제대로 된 공사 한 건 수주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는 기존 지역업체와의 경쟁은 물론 우후죽순으로 전입한 철새업체들에 밀려 단 한 건도 낙찰받지 못했다”며 “그중 지역 중소건설사의 몫을 빼앗는 철새업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철새업체 난립으로 지역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입한 업체들이 풍부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향토업체의 몫을 빼앗고 있다. 최근에는

평창올림픽 노린 수도권 업체 직원 없이 사무실만 차려 수주 4년간 낙찰 한 건도 못받기도 법원에 소송하고 탄원서까지

춘천의 A업체가 도내에서 발주된 10억원 규모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평창 소재 B업체에 밀려 수주하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도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제출할 탄원 동의를 준비 중이다. B업체는 수도권에 본사가 있는 건설사로 지역 사무실은 직원도 없이 폐쇄된 상태라는 것이 A업체의 주장이다.

도내 건설업계는 철새업체의 지역 내 공사 참여 제한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다. 철새업체 난립으로 지역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폐업한 향토 종합건설업체는 총 306개로 집계됐다. 지난 7월에도 1,0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관련 전기공사 8건 중 도내 업체 수주금액은 16.9%인 157억여원에 그쳤다. 나머지는 외지업체와 공사발주 전에 전입한 철새업체에 빼앗겼다.

도내 건설업계는 철새업체 전입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꾸준히 건의서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업체 보호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 내 한 건설단체장은 “경쟁력이 약한 지역업체들이 철새업체에 밀려 공사에 참여하지 못해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며 “건전한 건설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처들이 지역업체 보호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2018 평창올림픽, 도내 건설사 참여 기회 부족”

인터뷰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최근 지역회원사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오 회장은 영세한 도내 회원사들의 권익 증진과 보호가 경영활성화의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물론 도내 중대형 건설사업에 지역 회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는 물론 중앙정부, 평창조직위원회 등을 찾아 도내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취임 후 활동, 건설경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 회장 취임 4개월이 지났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업계 현안사항 뿐만 아니라 협회 주요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협의해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업계의 시급한 현안인 적정공사비 확보,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 각종 규제 법안의 저

지 등을 위해 강원도 등 도내 주요 유관기관을 방문해 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건설협회가 최근 지역회원사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인지. 지역업체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는 것이 물량

철재업체 난립... 자본유출 피해 도로확충 등 SOC예산 편성 시급

부족과 적정공사비 확보, 발주체의 불합리한 요구,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발주로 인한 입찰참여 기회 박탈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철재업체라 불리는 외기업체의 지역내 물량 수주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활동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도내 업체로 둔갑, 활동하는 철재업체들이 증합

활성화를 위한 보다 많은 SOC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의 기본적인 도로망 확충과 시설사업 예산 확보와 배정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

■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크지 않다고 한다. 입장은.

동계올림픽 시설사업에 승인예산만 1조4300억여원이다. 사업비 예산만 보면 강원도 건설경기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형 공사 위주로 선 발주가 이뤄지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도내 건설사는 일부 대형 업체에 국한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는 입찰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내 건설사는 올림피아 특수를 제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개최전에 마무리해야 할 공사항이 상당히 남아 있다. 언결도로 건설공사, 올림피아 지원 시설, 개최지 주변 하천 정비사업, 환경 정비사업 등 도내 중소건설사가 대부분 참여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로 발주될 예정이며 기대가 크다.

■ 도와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건설산업은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달리 수주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는 결국 많은 입찰기회를 얻어 부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건설관련 여산의 확보와 배정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고응은 최고의 복지다.

인은복 no@kado.net



■ 건설경기가 좋지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경기는 내수시장 활성화 정도의 정부 SOC예산 반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과거 정부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발전 기초를 이어 오다가 현재는 정부예산 편성에 있어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긴급진단 '비정상'의 굴레' 기술형입찰 시장 이대론 안된다

“수주해도 손해” 아예 입찰 기피

기술제안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 시장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유찰사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비롯, 계약제도 관련 각종 불공정관행 개선이 한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금의 건설시장에서 최악의 '비정상'은 단언컨대 기술형입찰이라 할 것이다. ▶관련기사 7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기술형입찰의 유찰은 시간이 갈수록 확산일로를 걸었고, 급기야 올해는 3건 중 2건꼴로 공사가 유찰로 지연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전문가 심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관정을 받았음에도 최저가 낙찰제(기타)로 전환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수백 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찰사태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공

자리고비 공사비에 잇단 유찰 입찰도 못했는데 착공부터... 시장 왜곡현상까지 나타나

사비 부족이 지목되고 있다. 예산 금액으로 수주에 성공한다 해도 손실이 불가피해 건설사들이 입찰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입찰참가 의지를 가진 업체 수가 줄어든 가운데, 담합이 차단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주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서 그 배경을 찾고 있다.

문제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역 숙원사업이 유찰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면서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유·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입찰도 치르지 못했는데 착공부터 이뤄진다거나 발주자와 시공사가 팀을 꾸려 설계부터 추진한 후 공사계약을 맺는 유례

없는 시장 왜곡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당장 유찰을 회피하려는 발주자들의 일회성 대책이 아닌 제도적, 정책적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상설계 등 시설물 계획단계에서부터 과잉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필요시 공사비 증액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현실적 방안으로 단독 제안을 허용하거나 확정가격 방식을 도입하는 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공사비(예산)에 부합하는 계획(설계안)을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적·정책적인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시점이다.
 봉승권기자 skbond@

긴급진단 - 기술형입찰시장 이대론 안된다

올 3건 중 2건 '한번이상 유찰'... 대형인프라 건설 차질

글 심는순서

- 〈상〉 애플단지 기술형입찰 현주소
- 〈중〉 잇단 유찰사태의 원인과 배경
- 〈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은

올해 기술형입찰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술제안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방법의 연착륙에도 불구하고 새로 공고된 공사 3건 중 2건이 한번 이상 유찰을 경험하는 비정상성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신규 입찰공고된 기술형입찰공사는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건설공사(1~2공구)를 시작으로 약 40건(일부 공기업 및 지자체 제외)으로 집계됐다.

‘역대최다’ 6번 유찰사태까지 최저가·수의계약 전환 줄이어 국책사업·지역개발 등 표류 막대한 사회적비용 손실 초래

연말까지 두 달 남짓, 추가 공고될 물량을 감안하면 연초 정부가 계획했던 규모의 발주는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단번에 입찰이 성사된 공사는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및 국립중앙수목원 조성공사 등 고작 13건 남짓에 불과하다.

신규 발주물량의 70%에 가까운 공사가 1번 이상의 유찰을 겪었다는 뜻이다.

2차례 이상 반복적인 유찰사태를 맞은 공사도 7건에 달하고 최근 1년새 기술형입찰을 포기하고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나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공사도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거듭되고 있는 유찰은 대형건설사업의 착공지연은 물론, 연쇄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최후 공고됐던 정부통합

전산센터(공주)의 경우에는 1년 반이 넘도록 표류 중이다.

작년 하반기 최저가로 전환된 원주~강릉 강릉차량기지 역시 당장 공사발주가 이뤄진다 해도 착공은 일러야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올 초에 최초 발주된 청주시국도대체우회 도로(북일~남일) 건설공사도 끝내 최저가로 돌아서, 최근에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발주됐던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5공구나 울릉 사동항 접안 시설 2단계 축소공사 등도 계획 대비 수개월 이상 착공은 미뤄질 상황에 처했다. 또 아직 추가 집행방식이나 일정 결정되지 않은 불발도 많아, 해당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반복적인 입찰공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례없는 ‘황당’사건도 속출 기술형입찰시장의 ‘비정상’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무계한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우선은 6번의 유찰이라는 역대 최다 기록이 나왔다.

턴키방식의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와 기술제안방식의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불명예 주인공이다.

공고 때마다 공사비 일부 증액을 비롯해 가중치 변경, 내역서 수정, 사전 사업설명회 등 발주자들도 갖가지 방식을 총동원해왔지만 결국 경쟁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와 함께 입찰제안서 접수가 압박한 상황에서 참가업체수가 증도하자하면서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일부 입찰참가사가 도청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설계 도중 손실 우려로 백기를 들고 포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공사의 5번째 입찰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신청사, 심해해양공학수조 건립공사 등이 이런 이유로 유찰사태를 겪었다.



이 가운데 심해해양공학수조 건립공사가 경우에는 입찰은커녕 실시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했는데, 수개월전 선대만 착공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실소를 머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과 형태의 계약도 등장했다.

착공은 급한데 유찰이 계속되자, 발주자가 시공사와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기본설계부터 진행하고 일종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설계 및 시공을 맡긴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회식장이 될 울림플라자 건립공사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년 가까이 턴키시장을 지켜왔지만 올해처럼 어려웠던 적도 없고 이상한(?) 상황이 연출된 적도 없었다”며 “유찰이 끊이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봉승권기자 skbond@

주식회사 성은

성은ALC

신뢰받는 ALC

친환경 건축자재로 신뢰받는 믿음의 기업

이제부터, 벽산ALC가 아닌

“성은ALC”입니다.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 '90% 육박'

건설업 하도급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사업자 10곳 중 5곳 이상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 원사업자 200곳, 수급사업자 1만5000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하도급거래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89.9%로 전년(89.2%)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현금 결제 비율이 64.8%로 가장 높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22.6%), 기

원청사 88.7% 월 1회 이상 지급

“추가·변경 서면 통지 안해” 55%

공정위 2015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입구매전용카드(1.1%), 구매론(0.8%), 기업 구매자금대출(0.6%) 등이 뒤를 이었다.

어음 결제 비율은 9.8%로 전년(10.5%)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원사업자의 88.7%, 수급사업자의 76.8%가 월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있다고 답했고, 2개월에 1회는 각각 8.9%, 8.1%였다.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원사업자는 83.3%.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지급한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의면한 원사업자는 단 1곳도 없었다. 조사 대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했다고 답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건설공사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 미발급과 유보금 설정에 대한 실태를 최초로 점검했다.

그 결과 건설업 수급사업자의 55.4%는 원사업자가 추가·변경을 위탁할 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유보금과 관련해서는 건설업 수급사업자 중 1.6%가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45.5%가 구두로 통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지면 안내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에 신흥균	A4
	産銀, 해외PF 대출 대폭 늘린다	A16
	LPGA 김세영 시즌 3승... 신인왕 예약	A24

거창구치소 신축 등 300억이상 공사 2건 눈길

주간 입찰동향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11.2~6) 경기도 평택시 수요의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모두 61건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정가격 기준 총 집행규모는 1857억원 규모로, 지난주 대비 132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집행건수가 4건 줄어들 전망이나 최저가 낙찰제방식의 대형공사 2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저가 대상공사는 법무부 수요의 거창 구치소 신축공사와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각각 2일과 3일 입찰이 집행될 예정이다. 추정가는 각각 329억원과 323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이번주에는 100억~300억원 미만 중대형공사 5건의 입찰이 집행될 예정이다.

우선 조달청은 3일 경북도교육청 수요로 109억원 규모의 김천남서부중학교(가칭) 교사 신축공사 입찰을 집행한다.

이어 4일에는 282억원 규모의 영도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충북 제천시) 가격개찰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6일에는 116억원 규모의 서울영동우체국 건립공사(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

본부)와 147억원 규모의 대치1 빗물펌프장 신설공사(서울 강남구) 입찰이 예정돼 있어 업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LH, 4710억원 규모 7건 집행

한국도지주택공사(LH) 본사는 이번주 추정가격 471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입찰 7건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주(242억원 3건)에 비해 입찰건수는 4건, 입찰금액은 4468억원 증가한 것으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이 재개됨에 따라 입찰금액이 급증했다.

이번주 최대어는 추정가격이 1448억원에 달하는 의정부민락2 B-9BL 아파트(공공임대리츠) 건설공사 10공구로, 대형과 중견 41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해 입찰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시흥목감 B-3BL 아파트(공공임대리츠) 건설공사 8공구(1035억원)와 대구신서혁신 A-7BL 아파트(공공임대리츠) 건설공사 8공구(966억원)도 1000억원 안팎의 대어로 눈길을 끈다.

또 경남혁신 A-10BL 아파트(공공임대리츠) 건설공사 6공구(644억원)와 석문국가산단 A-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300억원)도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주인공을 선정한다.

봉승권·채희찬기자 chc@

국토부, 건축공사 현장 불시 안전점검

‘4곳 중 1곳’ 부실 설계·시공 드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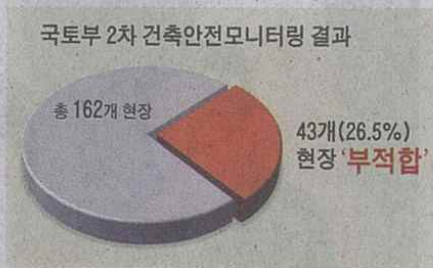
건축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의 중간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차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26.5%)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2014.5~2015.3)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했고, 이번 2차 모니터링(2015.7~20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에다 내화충전재와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총 5개 분야, 800개 현장으로 조사대상을 늘렸다.

2차 모니터링 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밝혀졌다. 또 샌드위치패널은 53개 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가운데 1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왔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이 없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3개 현



2차 안전모니터링 162곳 조사 보완조치 완료해야 공사 재개 관련자 벌금·영업정지 등 제재

장에 대해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등은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업무상 불성실로 건축물의 안전·기능 등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

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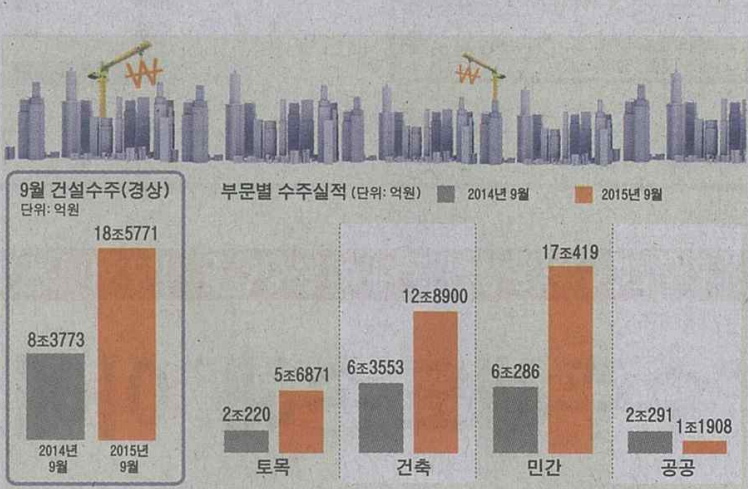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한 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3개월~1년간 영업정지를, 건설업자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명령할 수 있다. 또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는 2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 모니터링에서 부실공사로 판정된 공사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이 벌점 1~3점을 부과해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앞서 1차 모니터링에서는 조사대상 가운데 31%의 건축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련 감리자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시공사 3곳에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졌다. 나머지 15건(감리 11건, 시공 4건)은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 2015.11.2(월) 건설경제 】



공공수주 7개월만에 감소세 전환에도...

국내수주 실적 6년9개월만에 최대

건설수주가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의 수주 증가율이 나란히 세 자릿수로 확대된 가운데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부진을 만회하면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수주(경상)는 18조5771억원으로 전년 동월(8조3773억원) 대비 121.8%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올 2월 전년 동월 대비로 3.3% 감소한 이후 3월 들어 150.0% 급증하고서 4월 22.9% 늘어나는 데 그쳤다.

5월 들어서는 83.7% 늘어나며 반등했지만 6월 46.7%, 7월 23.5%로 증가폭을 축소하더니 8월 (-2.5%)에는 결국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9월 들어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지난 2008년 12월(22조2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이 동반 호조를 보인 데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감소를 메웠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토목부문 수주는 5조6871억원으로 전년 동월(2조220억원)보다 181.3% 증가했고 건축부문 수주는 12조8900억원으로 전년 동월(6조3553억원) 대비 102.8% 늘어났다.

공공부문은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민간부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건설수주 확대를 뒷받침했다.

민간부문 수주는 전년 동월(6조286억원) 대비 182.7% 늘어난 17조419억원을

기록했고 공공부문 수주는 전년 동월(2조291억원)보다 41.3% 감소한 1조1908억원에 머물렀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장·창고, 철도·궤도 등에서 감소했지만 주택, 기계설치, 사무실·점포 등에서 늘어 건설수주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도 1년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지난 9월 건설기성(불변)은 8조1840억원으로 전년 동월(7조2180억원) 대비 13.4%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올 3월 전년 동월 대비로 1.8% 줄어든

이후 4월 -8.4%, 5월 -4.7%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6월 들어 0.8% 반등하고서 7월 0.3%, 8월 3.4%로 4개월 연속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월 건설기성 증가율은 지난 2013년 10월(1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토목부문 기성(2조8580억원)이 전년 동월(2조6560억원)보다 7.6% 증가했고 건축부문(5조3260억원)은 전년 동월(4조5620억원) 대비 16.7% 늘어났다.

박경남기자 knp@

오늘의 주요 일정

▶기재부, 제11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고용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 결과' 발표